STRATEGY 21
통권42호 Vol. 20, No.2, Winter 2017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 · 중간의 갈등과 한국의 대응

김 강 녕*

Ⅰ. 서론

Ⅱ. 남중국해 영유권분쟁의 현황
1. 남중국해 개관
2. 남중국해 영유권분쟁의 현황과 전개

Ⅲ. 미・중의 해양안보전략 변화와 남중국해 전략적 가치
1. 중국의 공세적 해양안보전략과 남중국해 전략적 가치
2. 미국의 남중국해 전략적 가치와 공세적 현실주의

Ⅳ. 남중국해 관련 미중갈등의 주요쟁점과 향후전망
1. 최근 남중국해 관련 미중갈등의 주요쟁점
2. 남중국해 관련 미중갈등의 향후전망

Ⅴ. 한국의 안보・외교적 대응방향
1. 남중국해 미중갈등의 파장전망
2. 남중국해 관련 미중갈등과 우리의 대응방향

Ⅵ. 결론

* 조화정치연구원장, 해군발전자문위원, 정치학박사

Ⅰ. 서론

2006년 12월 중국 국가주석 후진타오(胡錦濤)는 '해양강국, 해군강국 건설'을 선언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중국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바 있으며, 2012년 11월 제18차 당대회에서는 해양굴기(海洋崛起)에 대한 전략을 천명한 바 있다. 기존의 대륙국가에서 해양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해양국가가 되기 위해 시진핑이 국가전략으로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가 바로 그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전략'과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아시아 재균형전략'의 충돌의 불가피성으로 인한 동아시아 해양안보의 불안정성이 고조되어왔다.[1)]

'미국우선주의'와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서 미국의 군사력 강화계획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력 전투함을 350척으로 증강하겠다고 대선과정에서 공약한 바도 있는 해군력 부분이다. 트럼프도 오바마의 아시아의 중시정책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태평양 해양에서 패권을 유지하고 중국과의 해양패권경쟁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이 선포한 인공섬에 대해 선언한 영해선언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작전인 '항행의 자유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도 오바마 행정부보다 빈번하고 과감하게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2)]

아편전쟁을 계기로 열강침략에 시달리며 주변세계에 관심을 둘 여력이 없었던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에 집착하기 시작한 것은 신중국의 탄생을 전후한 무렵이다. 국민당 정부시절 중국은 1947년 남중국해 지역 대부분을 11개의 단선(段線)으로 둘러친 공식지도를 제작·출판했다. 1949년 수립된 신중국은 1953년 새 지도를 반포하면서 이를 계승했으며 기존 11단선을 9단선으로 변경했다. '남해 9단선'이 바로 그것이다.

"중국인민은 기원전 2세기 한무제(漢武帝) 때부터 남해(남중국해)를 개발하고 이용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남해에 대한 주권과 관련된 권리는 오랜 기간의 역사적 과정 중에서 단계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 중국 외교부의 공식입장이다. 중국은 지도처럼 남중국해가 중국의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지는

---

1) 김덕기, "미국 해군정보국 보고서를 통해서 본 중국해군: 개괄적 함의," 한국국방연구원, 『주간국방논단』, 제1590호(15-43), 2015.10.26, p.2; 안광수, "한국 해양안보의 주요쟁점과 정책방향," 한국해양안보포럼, 『E-저널』, 제12호, 2016년 6월호.

2) 이춘근, "트럼프시대 미국 해군력 현황과 전망," 한국해양전략연구소, *Strategy 21*, Vol.20, No.1, Spring 2017, p.5, pp.20-21.

않지만, 남사(스프래틀리)군도, 서사(파라셀)군도 등 남중국해에 존재하는 다수의 도서지역을 자국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필리핀, 베트남 등 주변국들은 끊임없이 반발해왔다. 한쪽이 남중국해에 무장어선, 군함 등을 진입시키면 다른 한쪽이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없이 반복되어왔다.[3)]

그리고 시진핑 체제에 들어선 이후 중국은 남중국해에 다수의 인공섬(artificial islands, 人工島嶼)을 건설하여 직접적인 영유권의 굳히기 행보에 돌입하면서 갈등양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중국개혁개방의 총설계사' 덩샤오핑(鄧小平)은 중국의 동아시아 해양패권을 겨냥한 '도련선전략'을 수립했지만, 후대 지도자들에게 도광양회(韜光養晦: '빛을 감추고 은밀히 힘을 기른다.'는 뜻)와 영불당두(永不當頭: '영원히 우두머리로 나서지 말고 미국과 패권다툼을 하지 말라.'는 뜻)를 유훈으로 남겼다. 장쩌민과 후진타오 주석은 이를 잘 지켰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이를 무시하면서 관련국간의 갈등, 특히 미중갈등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4)]

최근 동아시아 해양안보쟁점 역내국가간의 영유권분쟁이나 경계획정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 미·중간 패권경쟁이라는 글로벌 쟁점으로 진화하고 있다. 미·중간의 해양패권경쟁은 냉전 당시 태평양과 인도양 제해권을 두고 미·소 양진영이 치렀던 전통적 해양군비경쟁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신해양패권경쟁은 과거의 단속적 상태에서 벗어나 상시적이고 거시적인 안보문제로 창발하고 있다. 미·중간 신해양패권경쟁을 정점으로 하는 동아시아 해양안보이슈의 임계점은 2015년 여름부터 불거진 중국의 남중국해 남사군도내 인공섬 조성 및 군사기지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미·중 양측이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불사하며 무력시위를 계속하는 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5)]

중국은 그동안의 경제성장의 확대를 위해 공세적인 해양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해양강국을 건설과 일대일로(一帶一路) 국가전략은 해양질서를 주도해온 미국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해양에서의 자유항행과 해양을 통한 접근유지는 미국이 추구해온 해양질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남중국

---

3) 이준삼, "'화약고'로 변해가는 남중국해…미중 갈등 '일촉즉발,'" 『연합뉴스』, 2015년 10월 20일자.
4) 하종대, "사드 보복은 중국의 커다란 전략적 실수," 『동아일보』, 2017년 3월 27일자.
5) 구민교, "미중간의 신해양패권경쟁: 해상교통로를 둘러싼 '점-선-면' 경쟁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5권 제3호, 2016년 가을호, p.37.

해에서 볼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한반도 주변수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해양이 격랑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6)]

이 글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간의 갈등과 한국의 대응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남중국해 영유권분쟁의 현황, 미·중의 해양안보전략 변화와 남중국해 전략적 가치, 남중국해 관련 미중갈등의 주요쟁점과 향후전망, 한국의 안보·외교적 대응을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Ⅱ. 남중국해 영유권분쟁의 현황

1. 남중국해 개관

남중국해는 말 그대로 중국 남쪽에 위치한 바다이다. 남북길이 2,900㎞, 동서길이 950㎞이며 남서쪽으로 말레이반도와 동남아시아, 북동쪽으로 대만(Taiwan), 동쪽으로 필리핀, 남쪽으로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섬에 둘러싸여 있다. 중국에서는 남해(南海)라고 부른다.

남중국해(South China Sea)는 중동원유를 싣고 걸프만을 출발해 인도양을 거친 수송선이 동북아시아로 향하는 길목이기도 하다. 수송선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항로인 말레이반도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사이의 약 800㎞에 달하는 말라카해협을 거쳐 싱가포르에 도착한 뒤, 선수를 90도 왼쪽으로 돌려 북상하게 된다. 그 때, 지도로 보면 왼쪽으론 베트남과 중국 남부해안에 접하고, 오른쪽으론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과 필리핀으로 에워싸인 안마당 같은 바다가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남중국해이다.[7)]

남중국해는 중국대륙의 1/3(356만㎢, 한반도의 14배) 크기로 동사·서사·중사·남사의 4개 군도 310여개의 암초와 사주로 이루어진 해양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요해역이다.[8)] 즉 남중국해 남쪽에는 남사(중국명: 南沙/난사, 필리핀명: 칼라얀, 베트남명: 쯔엉사, 영문명: Spratlys), 서쪽에는 서사

6) 안광수, “트럼프 행정부와 시진핑 정권의 갈등과 한국의 해양안보,” 한국해양안보포럼, 『E-저널』, 제23호2017년 5월호.
7) 장인철, “남중국해 위기,” 『한국일보』, 2015년 10월 25일자.
8)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전략경쟁』, 2016.4.12, p.1.

(중국명: 西沙/시사, 베트남명: 호앙사, 영문명: Paracels), 동쪽과 남쪽 중간에는 중사(중국명: 中沙/중시, 영문명: Macclesfield), 동쪽에는 동사(중국명: 東沙/둥사, 영문명: Pratas) 등 4개 군도가 위치하고 있다.

남중국해 내에 존재하는 자연해양 지형물은 대부분이 경제활동이 미미한 암초 또는 산호초로 이루어져 있어 그 지형물 자체로는 가치가 크지 않다. 관련국의 점유해역이 가장 넓고, 영유권분쟁이 가장 복잡한 남사군도의 경우, 본래 모든 도서의 해면위로의 돌출부분의 총면적은 약 2.1㎢에 불과하다. 5대양을 빼고 가장 큰 해역인 남중국해는 4개 군도의 영토면적을 훨씬 초월하는 경제적, 안보・군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길이 약 3,000㎞, 너비 약 1,000㎞에 달하는 드넓은 남중국해 해역에는 서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해상수송로의 핵심해역이자, 석유・천연가스 등의 자원이 풍부하게 묻혀 있기 때문이다. 조사기관이나 시기에 따라 편차는 있으나 대략 110억 배럴(barrel)의 원유와 190조m^3 가량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9] 또한 전세계 어업량의 10%를 차지할 정로도 어족자원도 풍부하고,[10]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남중국해는 전세계 해상상업물동량의 약 1/2, 에너지물동량의 약 1/3, 한국, 일본, 중국의 석유 수송량의 약 80~90%(한국 90%) 등이 통과하는 전략적 수송로이다.[11] 전 세계 해양물류의 절반 가까이와 원유 수송량의 60% 이상이 남중국해를 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원유수송의 대부분이 이 지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12]

2. 남중국해 영유권분쟁의 현황과 전개

가. 남중국해 영유권분쟁당사국 현황

남사(스프래틀리)군도는 중국,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등 6개국이 당사국이며, 서사(파라셀)군도는 주로 중국과 베트남이 대립하

9) Alexander Metelitsa and Jeffrey Kupfer, "Oil and Gas Resources and Transit Issues in the South China Sea,"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Issue Brief*, 2014, p.3.
10) 최현수, "남중국해가 심상치 않다," 한국해양안보포럼, 『E-저널 』, 제5호, 2015년 11월호.
11) 이지용, "남중국해 해양영유권분쟁: 역사적 배경과 현황 평가," 『격월간 시대정신』, 2016년 3・4월호.
12) 조혜리,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 『한국경제 뉴스』, 2015년 10월 30일자.

고 있다. 중사(맥클스필드)군도는 중국, 대만,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동사(프라타스)군도는 대만이 현재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남중국해 분쟁은 주로 남사군도와 서사군도에 집중되어 있고, 현재 남사군도를 제외한 3개 군도는 중국(서사군도, 중사군도)과 대만(동사군도)의 일국(一國) 실효지배 하에 있으며, 남사군도를 둘러싼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다.

남사군도는 남중국해의 남단에 위치한 해역에 위치하고 있고, 해수면위로 드러난 도서(島嶼)의 총 면적은 2.1㎢에 불과하지만 6개국이 분쟁당사국이다. 중국과 대만은 해수면상의 모든 도서 및 해수면 하의 모든 지형물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베트남은 해수면 상의 모든 도서에 대한 영유권을, 필리핀은 해수면 하의 모든 지형물에 대한 영유권을 각각 주장하고 있으며, 그 외 분쟁당사국들은 일부수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2015년 현재 중국은 11개, 대만은 1개, 베트남은 32개, 필리핀은 11개, 말레이시아는 6개 도서를 각각 점령하고 있으며, 분쟁당사국 가운데 브루나이(Brunei)만 점령도서가 없다.[13)]

미국은 그동안 그래왔듯이, 남중국해가 특정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포함된 영해가 아니라 자유항행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해라는 견지에서 항행(또는 항해)의 자유를 주장해왔고 미국 이외에도 이 지역에 직접 영유권분쟁을 벌이지 않고 있는 국가들은 '항행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14)]

중국은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동남아시아에 전략적 기지를 건설하고, 항로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전체의 80~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은 1992년 채택한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 제2조에서 남중국해의 4개 군도를 모두 자신의 영토로 선언하고 접근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물리력 행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중국은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역사를 내세우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후한(後漢) 시기부터 남사군도에 출항한 기록과 송·원·명·청 왕조시대의 각종 항해기록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1909년 청나라 광동성과 광서성의 영유권 선언으로 중국에 편입되었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패망이후에는 카이로선언(Cairo Declaration)으로 권리가 반환되었다고 주장한다.[15)]

국민당 정부시절 중국은 1947년 12월 남중국해 지역 대부분을 11개의 단선

---

13) 한국국방연구원, "세계분쟁정보: 남중국해 분쟁," http://www1.kida.re.kr/woww/history/closed_detail.asp?i dx=1121&closed=101&msection=100(검색일: 2017.8.10).

14) "남중국해의 영토 분쟁,"『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검색일: 2017.8.11).

15) 채은하, "남중국해 분쟁,"『Daum백과』,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XX85(검색일: 20178.11).

(段線)으로 둘러친 공식지도를 출판했다. 그 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후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는 1953년 11단선을 9단선으로 수정한 새 지도를 배포했다. 9단선 안에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사군도 등 남중국해의 80~90%가 포함되어 있다.[16]

베트남 역시 역사적 근거를 주장한다. 베트남은 1834년 남사군도를 베트남 영토로 표기했으며 식민지시기 프랑스가 1887년 영유권을 선언했다고 주장한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샌프란시스코회담(San Francisco Conference, 1951.9.8) 때 베트남은 서사(파라셀)군도와 남사(스프래틀리)군도에 대한 주권을 선언했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샌프란시스코회담 때 중국은 참여하지 못했다.[17]

필리핀은 '발견에 의한 선점'과 '시효취득' 이론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1956년 필리핀 국민인 토마스 클로마(Tomas Cloma)가 최초로 이 섬들을 발견했고, 이것을 1978년 당시 마르코스 대통령이 필리핀 영토의 일부로 편입시켰다는 것이다.[18] 남사군도는 필리핀 서쪽 팔라완 섬으로부터 380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지리적으로 필리핀과 가장 가깝다.

남중국해 해역에 대한 각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근거를 요약해 보면, 중국과 대만은 역사적 권원에 입각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베트남은 지리적 근접성 및 역사적 권원을, 필리핀은 지리적 인접성과 무주지 선점을,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는 지리적 근접성과 대륙붕 관련 해양법협약에 따라 영유권과 관할권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남중국해 해역에서 남사(스프래틀리)군도는 중국,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등 6개국이 당사국이며, 서사(파라셀)군도는 주로 중국과 베트남이 대립하고 있다. 중사(맥클스필드)군도는 중국, 대만,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동사(프라타스)군도는 대만이 현재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남중국해 분쟁은 주로 남사군도와 서사군도에 집중되어 있고 현재 남사군도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군도는 중국(서사군도, 중사군도)과 대만(동사군도)의 일국(一國) 실효지배 하에 있으며, 남사군도를 둘러싼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다.

---

16) 김문성, "미 군함 접근 남중국해 환초는 영유권분쟁 대표 인공섬,"『연합뉴스』, 2015년 10월 27일자.
17) 채은하, "남중국해 분쟁," 앞의 글.
18) 김동엽, "아시아 생각: 필리핀과 난사군도, 또는 스프래틀리 문제,"『프레시안』, 2011년 10월 26일자.

나. 남중국해 인공섬 현황

인공섬이란 바다를 메우거나 바다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만든 섬을 말한다. 인공섬은 공해(公海)상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비행장·어장시설·대륙붕개발시설 등의 구축물을 의미한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최근에 이와 같은 시설이 공해상에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국제법상 인공섬이 영역(領域)을 구성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공섬의 전체적 지위는 앞으로의 국제법 발달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륙붕개발을 위한 인공섬, 즉 그 시설 및 주변의 안전지대에 대한 법적 지위는 1958년의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된 「대륙붕에 관한 협약」에 규정되었다. 그 협약에 의하면 인공섬은 연안국의 관할하에 둘 수는 있으나, 도서(島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는 못한다. 또 인공섬 자체의 영해(領海)를 가질 수 없으며, 연안국의 영해를 측정하는 기선(基線)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19]

남중국해 인공섬의 건설은 중국보다는 주변국에 의해 먼저 추진되었다.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등이 남사군도에 있는 도(島)에 활주로를 건설했으며,[20] 중국의 인공섬 건설은 1974년 서사군도를 무력으로 점령한 이후 3개 도(島)에 대해 확장공사가 추진되었고, 2013년 이후 중국의 남사군도 일부도서에 대한 매립과 시설물 건설은 미국과 아세안 국가들에게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21] 2014년부터 남사군도 7개 초(礁)에 대한 중국의 인공섬 건설이 논란의 대상이 되다 2015년 미·중이 무력충돌위기까지 가기도 했다.[22]

서사군도 내 중국의 인공섬으로는 영흥도, 침향도, 광금도 등 3개가 있다. 특히 영흥도에는 삼사시(三沙市) 시정부가 위치하고 있고, 민간인 1,440여 명이 상주중이며, 군인 1,000여 명이 주둔하고 있다. 남사군도 내 중국의 인공섬

---

19) "인공섬," 『Naver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6001&cid=40942&c ategoryId=31719(검색일: 20178.12).

20) 필리핀은 1978년 중업도(中業島)에 1,300m 활주로를 건설하였으며, 말레이시아는 1993년 탄환초(彈丸礁)에 1,367m 활주로 건설하였다. 베트남은 2004년 남위도(南威島)에 550m 활주로 건설하였으며, 대만은 2008년 태평도(太平島)에 1,200m 활주로를 건설하였다. 백병선, "남중국해 美·中간 해양갈등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가안보와 전략』, 제16권 제3호, 2016년 가을호, p.52.

21) 한국해양전략연구소(2016.4.12), p.1.

22) 카터(A. Carter) 미 국방장관은 2015년 5월 30일 "중국은 지난 18개월 동안 2,000에이커(809 핵타)를 매립하였으며, 이는 역사상 남중국해 전체 매립양보다 많다."고 언급했다. Ben Dolven, "Chinese Land Reclamation in the South China Sea: Implications and Policy Options," *CRS Report*, 18 June 2015, p.1.

으로는 미제초(美濟礁, Mischief Reef), 저벽초(渚碧礁, Subi Reef), 영서초(永署礁, Fiery Cross Reef), 화양초(華陽礁, Cuateron Reef), 남훈초(南薰島, Gaven Reef), 적과초(赤瓜礁, Johnson South Reef), 동문초(東門礁, Hughes Reef) 등 7개가 있다(〈그림 1〉 참조). 7개의 인공섬에는 군인 800여 명과 민간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영서초에는 지휘소가 위치하고 있다.

〈그림 1〉 중국이 건설해온 7개 암초의 인공섬

출처: 이지용, "남중국해 해양영유권분쟁: 역사적 배경과 현황 평가," 『격월간 시대정신』, 2016년 3・4월호.

중국은 서사군도의 영흥도에 3,000m 활주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남사군도의 영서초에 3,000m 활주로를 건설중이다. 현재 중국의 인공섬 건설은 3개의 도(島)와 7개의 초(礁)라고 할 수 있다.[23)]

다. 남중국해 영유권분쟁쟁점의 국제화

남중국해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해양은 해상교통로서 오래전부터 강대국들의 각축대상이었다. 1930년대 이후 인도차이나반도를 지배한 프랑스와 동남아를 침략한 일본이 이곳의 도서를 영유하고 또 포기하면서 영유권분쟁이 시작되었다. 남중국해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이 주로 제국주의 정책이나 식민지 지배정책의 연장선에서 항해(또는 항행) 문제로 대립하던 곳이었다. 역사가 달라지면서 그 주체가 바뀌고, 항해 외에 영유권이나 해양경계 및 해양자원의 배분이 갈등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24)]

그동안 남중국해 분쟁이 전개되어온 과정은 대략 ①동남아로 팽창한 군국주의 일본과 인도지나 식민지국가 프랑스의 경쟁・마찰기(1930년대 후반~1945), ②일본패망후 국공내전기 월남의 실효적 지배기 및 관련국의 관심유발기(1945~1974), ③베트남-중국의 제1, 2차 무력충돌기(1974-1987), ④중국의 주요도서 실효적 지배 쟁취후 도광양회기(1988~2010), ⑤중국의 공세적 팽창주의로의 전환과 미국의 개입・대결기(2010-현재)로 정리해볼 수 있다.

남중국해에서는 지금도 여러 국가의 갈등과 대립이 반복되고 있다. 중국과 대만(Taiwan)뿐만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남중국해 연안국들도 이곳의 남사군도, 서사군도, 중사군도 등 수많은 소도와 암석의 영유권과 주변해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남중국해 해양영유권분쟁이 더욱 확대・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 후반 석유자원의 매장이 확인되면서부터이다.

현재 남중국해 영유권분쟁에서 가장 공세적인 국가는 남중국해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중국이다. 이미 1947년 중국은 중화민국(대만)이 발표한 11단선을 1953년부터 9단선으로 줄여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신의 해역이라 주장도 했지만[25)] 1951년 외교성명으로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1958

---

23)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7/19/20160719003504.htmlOutUrl=naver(검색일: 2016.7. 21); 백병선(2016), p.52.

24) 이창위, "남중국해 분쟁과 한국의 대응전략," 세종연구소, 『정책브리핑』, No. 2016-17(2016.07.25), p.3.

25) 구단선 안에는 동사군도, 서사군도, 중사군도, 남사군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Nine-Dash Line,"

년에는 '영해선언'을 하고 1992년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 조문화했다. 중국은 전후 미・소 양국의 해양패권에 반대하며 제3세계를 대표하여 연안국의 해양관할권 확대를 적극 지지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개혁・개방이후 경제발전을 이루고 군사강국이 된 중국은 해양강대국으로의 변신을 모색・추진해왔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은 베트남과의 '해양경계획정협정(2001),' 아세안국가들과의 '남중국해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행동선언(DOC, 2002)' 등을 통해 해양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식에도 합의했지만 비효과적이었다. 2009년 중국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의 대륙붕범위 신청에 반대하여 처음으로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에 '9단선'을 포함한 지도를 제출하기도 했다.

남중국해 영유권분쟁은 특히 지정학적으로 긴밀한 베트남・필리핀 양국과 중국간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분쟁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베트남은 중국과 무력충돌을 했고 1974년 서사군도, 1988년 적과초(존슨암초)를 각각 점령당했다, 그 후 2008년 5월 베트남 외교부는 대만군 사령관의 남사군도(베트남명: Truong Sa)의 바빈(Ba Binh) 섬 방문을 베트남 주권에 대한 침해행위로 간주하여 '해양경계획정협정'의 취소를 촉구하면서, 베트남이 남사・서사군도에 대한 주권주장을 뒷받침하는 법적・역사적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한 후, 동년 6월 '해양・도서관리국'을 발족시켰다.[26] 최근 베트남과 중국 양국은 활발한 경제협력을 전개하는 가운데 육상국경 및 해상경계선 관련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기도 하지만 해양자원분쟁은 여타 관계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베트남 이외에 또 다른 핵심적 당사국은 필리핀이다. 중국은 지난 1994년부터 필리핀측 해역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필리핀은 1995년 2월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사군도 팡가니방 산호초(Mischief Reef)에서 중국의 구조물을 발견했다. 그 후 1997년 4월 필리핀의 스카버러 섬(Scarborough Shoal, 黃岩島/황옌다오) 내에 설치한 중국령 표지를 제거하기도 했다. 결국 2012년 4월부터 이 섬은 중국의 실효적 지배하에 놓이자 이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우방인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며 중국을 압박해왔다. 이것은 중국이 베트남이 아닌 다른 분쟁당사국이 주장하는 도서를 점유한 최초의 사례로서 남중국해 분쟁의 국제화・글로벌화 가능성을 낳게 하는 계기로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Wikipedia, July 28, 2017, https://en.wikipedia.org/wiki/Nine-Dash_Line(search date: August 19, 2017).

26) 한국국방연구원, 『세계분쟁정보: 남중국해 분쟁,』, 앞의 글.

실제로 필리핀은 지난 2013년 1월 22일 중국을 상대로 중국이 만든 9단선과 인공섬에 영유권이 있는지를 따져보자며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에 제소하여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은 법적 근거가 없고 인공섬 건설도 불법이라는 판정의 결과를 얻어내기도 했다. 중국의 해양정책의 변화는 해양에서의 법의 지배나 책임을 수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2016년 7월 12일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에서의 패소를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중국의 남중국해 일대 인공시설건설에 제동이 걸린 셈이나 중국은 이러한 판정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27]

그동안 필리핀은 미국과의 방위협정을 통해 남사군도의 안전확보를 희망해왔다. 이에 미국은 분쟁당사국간 해결을 이유로 남사군도 개입을 거부해왔다.[28] 그러나 최근 중국의 공세적 팽창주의전략 추진에 대해 미국도 전략적 공세성으로 맞서 양국이 직접적으로 맞닥뜨려 갈등·대결을 벌이는 양상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다.

Ⅲ. 미·중의 해양안보전략 변화와 남중국해 전략적 가치

1. 중국의 공세적 해양안보전략과 남중국해 전략적 가치

가. 중국의 공세적 팽창주의전략

중국은 과거 「장쩌민(江澤民)」시기까지는 소위 '제1도련선(島鏈線)' 내에서의 근해(연안)방어전략에 치중했고, 이후 「후진타오(胡錦濤)」시기에는 '제2도련선'까지 확대하는 '반접근/지역거부(A2AD, Anti-Access, Area Denial)' 전략을 채택한 바 있다. 제1도련선은 일본열도-오키나와-대만동부-필리핀 서부-인도네시아 보르네오로 이어지는 선을, 제2도련선은 일본 이즈제도-오가사와라제도-사이판-괌-인도네시아-파푸아뉴기니로 이어지는 선을 각각 말한

27) 이창위(2016.07.25), p.3.
28) 한국국방연구원, 세계분쟁정보: 남중국해 분쟁,』, 앞의 글.

다. 또한 반접근(A2)은 중국이 설정한 방어선 내 미국의 군사력 투사 방지를, 그리고 지역거부(AD)는 동 방어선 내에서 미군의 행동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29]

2012년 10월 시진핑(習近平) 집권과 함께 중국은 '해양강국 건설'이란 구호하에 해양주권과 '핵심이익(core interest)'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A2AD전략을 본격 추진하고 관련 군사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30] 이러한 전략변화에 따라 중국은 남중국해를 안보요충지로 인식하고 동 해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물론, 2014년 초부터는 실효지배중인 인공섬을 매립하여 군사거점화를 추진하여 국제적으로 물의를 빚어 왔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시진핑'시기의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전략이 말해주듯이, 강대국으로 국가정체성의 전환과 함께 해양과 대륙을 아우르는 복합성 국가로 탈바꿈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의 새로운 국가발전 대전략에서 '해양세력화'는 핵심적 구성분이다. 특히 중국에게 사실상 유일한 해양출구이자 해양라인의 출발점인 남중국해의 지정학·전략적 함의는 매우 크다.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해서 중국은 멀게는 후한시대부터 근·현대시기 사료 및 항해기록 등을 제시하며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나, 영유권분쟁시 구체적 증거효력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총 7개 도서를 점유하고 있지만 베트남보다 점유수가 적어 '실효적 지배' 원칙 역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현재 베트남 27개, 필리핀 8개, 말레이시아 5개, 대만 1개, 등의 도서 및 지형물을 분쟁당사국 들이 점유하고 있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논리는 해양영유권 인식부족, 연안방어위주전략, 제한적 해군력 투사역량, 냉전논리 등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31]

하지만 중국은 1950~60년대 영토주권에 대한 '주권적 선언'으로 영유권분쟁대응에 나서기 시작했고, 1970~80년대에는 주권선언과 '자위반격(自衛反擊)'을 겸용했으며, 1990~2000년대에는 이른바 '각치쟁의(擱置爭議)[32]·공동개발'정책을 주장하기도 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베트남의 무력충돌 사례

29) 김재철, "남중국해문제 현황과 평가,"『남중국해문제와 동아시아 안보』(2016년 제6차 세종정책안보포럼, 2016.6.15, 서머셋 팰리스 서울 2층), p.14.

30) 지난 22017년 3월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를 끝으로 막을 내린 중국 한해의 최대정치행사인 '양회'에서도 '해양강국 건설'은 재천명·강조되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동향분석』, Vol.20, 2017.3, p.1.

31) 김재철(2016.6.15), p.14.

32) 각치쟁의(擱置爭議)는 '이견이 존재하는 부분은 미뤄두자'는 의미이다. 양갑용, "시진핑-마잉주 이벤트, 왜 성공했나?,"『프레시안』, 2015년 11월 9일자.

(1974, 1988)가 자위반격의 사례라는 것이다. 중국은 공동개발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그것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는 탈냉전,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중-아세안 다자간 협상방식의 등장, 남사군도문제의 국제화, 중국의 대주변국 관계개선노력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은 특히 2009년 이후로는 '소규모 도발감행후 위기관리'라는 방식을 통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한편, 자국에 유리하게 현상을 변경하려는 새로운 대응법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간 증강된 해군력을 적극 활용하여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동시에 '비군사적 강제'(순시선 확대배치, 외국어선 억류, 에너지 개발방해, 독자탐사활동, 대규모 중국어선 조업지원 등) 조치의 강화가 바로 그것이다.

중국은 아직 영토분쟁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한 사례가 없으며, 더구나 '내정불간섭원칙'을 강조해온 중국의 외교적 전통을 감안할 때 중국이 국제법적 해법을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사법적 해결방식에 대한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명해두고 있지만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실효적 지배를 인정받기 위한 각종조치들을 병행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지리적 발견, 점유·관리관련 역사적 증거수집노력 및 해군력을 통한 실효적 점유활동을 함께 강화하고 있다.[33]

미국의 해군제독을 지낸 국제정치 학자 알프레드 마한(Alfred T Mahan)은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필수요소 중의 하나로 해군력 강화를 들고 있다. 해외시장 접근을 위한 해상교통로 확보, 대항해군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보급기지 및 급유시설 구축 등을 위해서는 해군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34] 중국의 최근 해군력 증강은 이 같은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으며 공세적 팽창의 구체적인 모습은 영토에 대한 야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격적 현실주의'로 유명한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 교수는 중국의 평화부상(和平崛起) 의도를 지속적으로 의심해왔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패권국이 되기 위해 이 지역에서 미국지위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중국의 의도는 지역패권국 위상을 굳히는 것이다. 미국의 양보의사가 없다면 중국은 자국의 목표달성을 위해 미국과의 한판 대결도 불사하거나 자국의 야심을 접어야 하는 숙명적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35]

---

33) 김재철(2016.6.15), pp.14-15.

34) Alfred T. Mahan, *The Influence of Seapower upon History:1660-1783* (Boston: Little Brown and Co. 1889) 참조.

미국 해군전쟁대학 중국해양연구소의 앤드루 에릭슨(Andrew Erickson)박사는 중국이 최근 아시아에서 선도적인 대륙국가로서의 위상을 굳히기 위해 해양으로의 공세적 팽창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원자력 항공모함의 건조, 항모 탑재기 젠(殲)-15(J-15) 시제기(prototype) 제작, 미해군을 위협적인 대함탄두미사일인 DF-21D의 개발・배치 등 중국의 거침없는 해군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36]

중국이 해양대국화를 지향하며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해명처럼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이라는 것이다.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중국의 해양군사력 강화가 분쟁관련국들에 중요한 압력을 행사하여 이 지역에서의 분쟁을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 전략적 자원이 된다는 것이 에릭슨의 분석이다. 거침없이 상대에게 압박을 가한다는 '돌돌핍인(咄咄逼人)'의 논리라는 것이다. 중국의 군사력 강화는 지역유관국들에 직접적인 물리적 위협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미국을 견제하면서 지역패권국의 야망을 달성하는 심리적 기제를 구축하려는 2가지 효과를 동시에 의도함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해군력 증강을 통해 중국은 지역패권국지위를 추구하고 있다. 아시아 맹주위상을 굳히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직접대결은 피하고 있는듯하지만. 아시아 여타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영토적 팽창야심은 숨겨진 발톱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37]

나.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가치

중국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해양전략의 추진하며 남중국해 영토분쟁에 집착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해관계 및 전략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핵심적 국가이익의 보호이다. 중국의 핵심이익은 사실상 영토문제이다. 중국은 대만문제를 비롯하여 신장・티벳자치구문제 동중국해의 조어도(釣魚島/댜오위다오), 남중국해의 남사군도(南沙群島), 서사(西沙)군도 등 다양한 지역에서 국가내 갈등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충돌양상도 빈번히 보여주고 있다 중국정부는 현안지역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양보를 한다면 그것은 여타지역에 도미노처

35) 김필재, "미(美) 백악관 수석전략가 '5~10년내 미-중(美-中) 남중국해서 전쟁' 예상," 『조갑제닷컴』, 2017년 2월 3일자.
36) 문순보, "남중국해 영토분쟁: 중국의 지역패권주의와 관련국 대응,"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2011년 7월호, p.4.
37) 문순보(2011.7), p.7.

럼 확산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중국정부는 분쟁지역 어디서든 양보할 의사가 없으며 힘의 논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둘째, 영토에 대한 야심은 앞서 언급된 중국의 지역패권에 대한 열망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해와 관심에서도 추동되고 있다. 특히 동중국해의 조어도(釣魚島/댜오위다오)나 남중국해의 남사군도는 천연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남중국해 해저에는 전세계 석유매장량으로 볼 때 4위권에 해당하는 다량의 석유(177억톤)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다.[38] 이러한 까닭에 중국은 1982년 각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인정하는 유엔해양법협약에 서명했음에도 중국으로부터 1천km 이상 떨어진 암초에 시멘트를 부어 인공섬을 만들어 남사군도에서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군사적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다.[39]

셋째, 지정학적·지전략적 중요성이다. 남사군도는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인 동시에 군사적으로도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유조선을 비롯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배가 드나드는 길목이기 때문에 해상교통로로서 지니는 가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다. 이와 같은 장점들은 중국의 이목을 끄는 매력적인 대상이 아닐 수 없다.[40] 중국에 있어서 매력이 큰 남중국해는 중국과 갈등·경쟁관계에 있는 미국에 있어서도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미국의 남중국해 전략적 가치와 공세적 현실주의

가. 미국에게도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남중국해

미국은 남사군도문제에 대해 동아시아 지역의 세력균형유지라는 전략적 목표에 따라 '영유권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자유통항(또는 자유항행)의 보장'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는 소극적 현상유지정책에서 1995년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분쟁격화[41]를 계기로 적극적 개입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왔다.

---

38) 김재곤, "왜 남중국海 놓고 다투나,"『조선일보』, 2011년 6월 16일자.
39) 정영빈, "남중국해 미·중간 충돌핵심은 '무해통항권,'"『연합뉴스 TV』, 2015.10.30. 14: 28.
40) 문순보(2011.7), p.5.

남사군도가 관련국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 에너지 가치 차원을 넘어 그만큼 군사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임은 전술한 바와 같다. 미국은 아태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원료의 90%를 남중국해 항로를 통해 북미대륙으로 운송하고 있고 남중국해 지역이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가 이 지역에서의 항행의 자유가 제한을 받는다면 이는 동아시아 지역전체에 대한 안보위협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남사군도가 서태평양과 인도양으로 통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과 남사군도에 구축되는 중국의 레이더, 통신기지, 비행장 등의 군사시설이 미국의 본토 및 우방국과 동맹국의 안보이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미국은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42]

아시아 재균형전략 공표(2011)이후 미국은 남사군도분쟁에 대해 중립과 불개입의 원칙을 밝히면서도 베트남, 필리핀 등 분쟁 관련국과 군사협력을 강화,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고 분쟁당사국간의 군사적 충돌을 억지하는 적극적 개입정책으로 전환을 도모해왔다. 2012년 1월 미국의 신국방전략지침과 글로벌교역망 안보를 위한 국가전략에는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우려가 반영되어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아시아 재균형전략'[43]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남중국해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을 군사안보적으로 고립시키는 전략기조를 유지・강화하려 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중국해와 남사군도 영유권 문제를 놓고 중국과 이해당사자 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주로 미국의 우방국 혹은 동맹국이거나 이 지역의 상대적 약소국들이다. 이들 국가들은 영유권 문제를 놓고 중국과의 갈등관계가 형성될 경우 미국의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어 남중국해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결코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와 상호 수렴되기 힘든 구조라 할 수 있다.[44]

---

41) 19995년 2월 필리핀은 팡가니방 산호초(美濟礁, Mischief Reef, 필리핀의 200해리 EEZ내에 위치)에서 중국의 구조물을 발견한 후 동년 3월 23일 필리핀은 해군을 동원해 팡가니방 산호초에 중국이 건설한 어선 대피소를 파괴했다. KIDA, "남중국해 분쟁일지,"『Naver 지식백과: KIDA 세계분쟁 데이터베이스』, http://te rms.naver.com/(검색일: 2017.8.17).

42) 이수형, "남중국해와 동아시아 안보,"『남중국해문제와 동아시아 안보』(2016년 제6차 세종정책안보포럼, 2016.6.15., 서머셋 팰리스 서울 2층), p.91.

43) 오버마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전략'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정삼만, "미국의 진행형 동아시아 군사력 재균형 전략과 해양안보 딜레마,"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편,『2014-2015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 2014.12, pp.75-114.

나. 미국의 해양안보전략의 공세성

1) 오바마 행정부의 재균형전략

미국에게도 남중국해와 남사군도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임에 틀림이 없으나, 적어도 중국이 서사군도를 중국령이라 선언한 해이기도 한 1995년 이전까지는 소극적 현상유지정책을 펼쳐왔다. 그간 미국은 '영유권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자유통항의 보장'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수준으로 일관해 왔다. 그 후 미국은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대응 및 동아태지역의 세력균형유지라는 전략적 목표에 따라 이른바 '아시아 재균형전략'을 채택하고 이 지역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정책으로 전환을 모색·추진해왔다고 볼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중립·불개입원칙'을 밝히면서도, 중국과의 영유권분쟁 관계에 있는 역내국가들과의 정치·외교·군사협력을 강화하며 대중견제의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미국은 뚜렷한 대중전략개념의 부재로 인해 그간 남중국해문제에서 중국의 올바른 행동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는 판단 위에서 재추진한 전략이 바로 미·소 냉전승리에서도 활용한 바 있는 ①'비용부과(cost-imposing)전략,' ②'제3의 상쇄(third offset)전략,' ③'연방방위(federated defense)구축' 등이다.[45]

먼저 비용부과전략이란 군사경쟁과정에서 상대의 많은 비용의 지출을 유도하여 장기적 경쟁승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전략을 말한다. 상대의 군사적 효율성 저하(방어치중), 무기체계 무력화 등을 위한 군사적 비용의 증가, 외교적 항의 등을 통한 상대의 평판악화 및 회복비용 초래 등을 위한 정치적 비용의 증가 등을 통해 상대인 중국에 장기적 경쟁승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전략인 것이다.[46] 미국은 이를 위해 중국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정보수집 및 이의제기를 하는 '정찰·감시레짐'과 더불어 일관된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는 '정책집행레짐'의 구성을 도모한다는 것이다.[47]

다음으로 상쇄전략은 경쟁상대의 수적 우위를 새로운 기술적 우위로 상쇄

---

44) 신상진, "남북관계 안정적 관리로 미중갈등 한반도 영향 최소화해야,"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http://kcrcpol icy.blog.me/220902519815(검색일: 2017.8.15).

45) 이수형(2016.6.15), pp.16-17.

46) Thomas Mahnken, "Alliance Maritime Strategy in Asia," http://goo---gle.appspot.com/ (search date: August 17, 2017).

47) "Offset Strategy," *Wikipedia*, January 21, 2017, https://en.wikipedia.org/wiki/Offset_strategy (search date: August 17, 2017).

시키는 전략으로서, 미국은 지난 냉전기에 동(同) 상쇄전략을 시행함으로써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고 최종적으로 냉전에서 승리한 바 있다. 이는 기술확산에 따라 중국도 미국 못지않은 정밀무기체계를 염가에 대량생산해 남중국해 일대에 집중 실전배치하고 있는바, 동지역의 군사력균형에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현 미중경쟁을 냉전 때와 마찬가지 수준의 근본적 위기라고 보고, 기존접근법으로는 극복불가하며 대칭적 경쟁 역시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 국방부는 지난 2014년 말 「전략예산평가센터(CSBA)」에 의뢰한 '제3의 상쇄전략' 개념연구에 기초하여 「국방혁신구상(DII)」을 발표하여 2015년 시범적용 후 2016년부터 본격 추진했다. 이 구상을 위해 스텔스, 무인기, 레일건 등 다양한 신기술 및 '공해전'과 '국제공역에서의 접근과 기동을 위한 합동개념(JAM-GC)' 등 새로운 전략개념을 도입한 바 있는데 이는 사실상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역량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미국은 독자적인 대중전략 수립 및 역량확보뿐만 아니라 여러 동맹·우방 및 파트너 국가들의 능력을 통합해 전략적 공동대응이 가능하게끔 '협력적 군사력 건설'방침에 따라 이른바 '연방방위' 네트워크구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각국의 국방비 제약을 감안해 '국방분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국과 동맹·우방의 부담은 완화하면서 동맹차원의 역할·역량·협력은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대중국 포위·봉쇄망을 완성한다는 복안이 바로 그것이다.[48] '연합방어 프로젝트'는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 역량을 공통 관심사를 발전시키는 지역방어체계에 통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고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49]

2) 트럼프 행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

지난 2016년 11월 미국의 대선에서 일반적으로 외교에 있어 매파에 속하는 힐러리 클린턴이 낙선되고, 외교에 있어 신고립주의를 외쳐온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미국의 안보정책(예컨대 '아시아 재균형전략')은 그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왔다.[50] 그러나 이것은 섣부른 전망일 수도 있다는 반

48) 이수형(2016.6.15), pp.16-18.

49) CSIS, "Federated Defense Project," https://www.csis.org/programs/international-security-program/glo bal-threats-and-regional-stability/federated-defense(search date: August 17, 2017).

론도 가능하다. 트럼프가 당선되기 하루 전 '포린 폴러시(*Foreign Policy*)' 온라인 판에 실린 트럼프의 두 정책보좌관의 글은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Rebalance to Asia)'이 시의적절한 정책이었으나, 그 실행에 있어 미국의 유약한 의지를 드러냈고 결과적으로 동맹국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아태지역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고(故) 리콴유 싱가포르 총리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강조하며 해군함정을 현재의 274척에서 350척으로 증가시켜 남중국해 지역의 안정과 중국의 자라나는 야망에 대한 효과적 견제를 도모하는 전략을 확고히 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51]

트럼프 대통령 취임(2017.1.20) 직후, 백악관은 그 공식 홈페이지를 재구성하며 6가지 주요정책(6개 국정기조)을 천명했는데, 그 중 하나가 '미국우선외교정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이익'과 '국가안보'에 초점을 둔 외교정책을 펼쳐 나가고 '힘을 통한 평화'를 그 외교정책의 중심으로 삼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52] 또한 2016년 12월 트럼프의 대만총통과의 통화중 '하나의 중국' 정책이 중국의 환율 및 남중국해문제 등 미·중 분쟁이슈 해결을 위한 하나의 협상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53]

남중국해와 관련해서 백악관 수석 전략가 스티브 배넌(Steve Bannon)은 지난 2016년 3월 미국과 중국이 5~10년 사이 남중국해를 놓고 전쟁을 벌일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슬람과 중국은 미국의 가장 큰 두 위협요인임을 분명히 한 적이 있다.[54] 국무부 장관 렉스 틸러슨도 상원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의 인공섬에 접근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55] 백악관 대변인 숀 스파이서도 2017년 1월 '국제'영토인 남중

---

50) James Palmer, "China Just Won the U.S. Election," *Foreign Policy,* November 9, 2016; Ankit Panda, "Donald Trump Won. Prepare for Uncharted Geopolitical Waters in Asia," *Diplomat*, November 9, 2016.

51) Alexander Gray and Peter Navarro, "Donald Trump's Peace through Strength Vision for the Asia-Pacific," *Foreign Policy*, November 7, 2016.

52) 그 외의 정책공약은, "America First Energy Plan," "Bringing Back Jobs And Growth," "Standing Up For Our Law Enforcement Community," 그리고 "Trade Deals That Work For All Americans"이다. https://www.whitehouse.gov/(search date: August 17, 2017) 참조.

53) Jane Perles, "The Options for China If Trump Uses Taiwan as a Bargaining Chip," *New York Times*, December 13, 2016, p.A17.

54) Benjamin Haas, "Steve Bannon: "We're going to war in the South China Sea...no doubt'," *Guardian*, February 2, 2017.

55) David Brunnstrom and Matt Spetalnick, "Tillerson Says China Should Be Barred from South China Sea Islands," *Reuters*, January 12, 2017.

국해를 어느 한 나라가 차지하는 것을 막겠다고 공언했다.[56]

오바마 행정부는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며 중국의 주장을 묵살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왔었지만 이러한 경향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다 강해지는 모습이다. 지난 2017년 2월 중순 미 항모 칼빈슨함이 남중국해에 진입하여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남중국해에 대한 인식과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을 시사해주고 있다.[57]

다. 미중갈등과 아세안(ASEAN)

아세안(ASEAN()의 주된 관심사는 '항행의 자유'와 안보문제보다는 해양영토 분쟁해결에 있으며, 미・중 세력균형을 통한 안보・경제적 실리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세안은 2002년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DOC)」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행동수칙(COC)'을 조기에 결론내자고 주장한 바 있다. 2002년 아세안 회원국과 중국간에 합의・채택된 DOC의 구체적인 행동수칙(COC)이 아직 미체결 상태로 남아 있다.[58]

중국에 맞대응하기에는 개별 회원국은 물론 집단적으로도 역부족인 아세안으로서는 '중국 대세론'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역외국가 및 역내 이해상관자들의 적극적 개입을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의 일방적 행위억제차원의 당사국 해양안보 역량증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역외 주요국의 지원・협력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아세안은 미・중간 직접충돌을 바라지는 않으며, 오히려 역외국가 개입이 중국의 일방적인 행태를 증폭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다.[59] 아세안 주요국의 미중갈등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필리핀의 입장과 대응은 '남사군도 일부 영유권 주장과 대미 상호방위조약 활용'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필리핀은 기본적으로 위치상의 근접성과 함께 '발견'과 '시효취득'이론을 근거로 남사군도 일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

---

56) "Spotlight: Official Reaffirms Chinese Stance on South China Sea," *Xinhua*, January 26, 2017.

57) 김종호, "인공섬 vs 미 항모, 남중국해 둘러싼 미・중 갈등 다시 고조," 『노컷뉴스』, 2017년 2월 24일자.

58) KIDA, "남중국해 분쟁일지," 앞의 글.

59) 박준성・최은미, "남중국해문제 현황과 평가," 남중국해문제와 동아시아 안보』(2016년 제6차 세종정책안보포럼, 2016.6.15., 서머셋 팰리스 서울 2층), p.18.

고 있다. 1979년 2월 남사군도 57개 섬을 '칼라얀 군도(Kalayaan)'라고 명명하고 자국영토에 편입 조치했다. 필리핀 역시 2009년 '영해기선법' 개정을 통해 아로요 대통령은 '황암도'(黃巖島/황옌다오, Scarborough Shoal)'를 필리핀 영토로 편입시키는 영해법에 서명했다.[60] 그 후 황암도 사건을 계기로 필리핀은 2013년 1월 남사군도 분쟁을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했고 상설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이 제기한 소에 대해 지난 2016년 7월 12일 남해구단선 내 자원에 대한 중국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61] 이처럼 필리핀은 남중국해 분쟁의 국제화를 기도하면서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을 활용해 중국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62]

다음으로 베트남의 경우는 '남사군도 전체 영유권 주장 및 분쟁국제화 시도'로 요약이 가능하다. 베트남은 역사적 증거 및 이른바 '대륙붕원칙'에 입각하여 남사군도 전체가 자국의 칸호아성(Khá hHò Province) 근해지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효과적인 점유와 승계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남사군도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여타국과 다른 점이다. 베트남은 양자·다자외교로 남사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편, 현재 남사군도에 가장 많은 섬을 점령한 상태에서 병력배치 및 헬기장 건설 등 실효적 지배강화를 꾀하고 있다. 베트남은 1995년 아세안 가입이후 다자간 해결과 국제협상을 선호하고 있으나, 중국에 대한 경계와 남중국해 분쟁 국제화 차원에서 미국과의 안보협력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끝으로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의 경우 '부분 영유권 주장과 다자해결 선호'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는 '대륙붕 협약'에 근거, 자국에 인접한 도서에 대해 부분적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실리차원의 자원개발에 관심이 큰바, 분쟁격화 및 군사충돌은 이러한 이해에 반한다고 보고 아세안 등을 통한 다자간 해결방식을 선호하는 입장이다.[63]

---

60) 김택연, "미·중 관계와 남중국해 분쟁,"『아태연구』, 제23권 제2호, 2016, pp.48-49.

61) 김태구, "중(中) 남사군도 분쟁 패소… 중재재판소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근거 없어,'"『쿠키뉴스』, 2016년 7월 12일자.

62) 박광섭, "남중국해 남사군도와 중국의 움직임에 대한 필리핀 아키노 행정부의 국방정책과 대응전략: 기능주의적 방식 모색," 한국아시아학회,『아시아연구』, 제15권 제1호, 2012, p.127.

63) 세종연구소,『2017년 제6차포럼 결과보고서: 남중국해문제와 동아시아 안보』, http://www.google.co.kr/(검색일:2017.8.17).

Ⅳ. 남중국해 관련 미중갈등의 주요쟁점과 향후전망

1. 최근 남중국해 관련 미중갈등의 주요쟁점

해양과 관련한 미중갈등은 무엇보다도 남중국해 해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항행의 자유를 내세우는 미국의 중대한 이익과 중국의 핵심이익이 해양에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고 증진하는 기조로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유지하고자 한다. 중국은 국가주권, 국가안전, 영토보전, 국가통일, 중국헌법에 기초하는 국가정치제도와 사회안정, 경제사회의 지속발전을 핵심이익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원유와 천연가스를 매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자국 수출입 물량의 약 80%가 통과하는 남중국해를 핵심이익으로 선언한 터이다.[64] 최근 남중국해 분쟁의 주요쟁점은 크게 ①'9단선'문제, ②항행의 자유문제, ③도서매립문제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가. '9단선'문제

중국은 2009년 유엔에 제출한 문건과 2012년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한 지도를 통해 남해(남중국해) '9단선'(九段線, nine dash line)문제를 제기했다. 중국은 '9단선'을 '영해기선'으로 간주하며, 유엔해양법(UNCLOS)에 앞서 선포된 것이므로 우선한다고 주장하나, 그 실체나 법적 효력은 불분명한 상황이다. 9단선 또는 남해9단선(南海九段線)은 중국과 대만이 주장하는 남중국해의 해상경계선이다. 중국의 국민당 정부가 1947~48년 설정・선포한 남중국해 가상경계선인 '11단선'을 이후 출범한 중국 공산당 정부가 승계하여 '9단선'으로 변경한 다음 1949년 「저우언라이(周恩來)」총리가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반해 미국 및 아세안 분쟁당사국들은 9단선이 무리한 주장이고 유엔해양법 위반이라며 국제법적 효력을 불인정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영토선, 역사적 해상선, 역사적 권리선 여부 등 9단선의 성격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며, 9단선 내 모든 지형지물・수역에 대한 영유

64) 이수진, "미국의 중요한 국가 이익과 중국의 핵심이익," KIDA, 『동북아안보정세분석』, 2012.11.23.

권 주장여부도 불명확한 상태이다. 따라서 9단선의 실체와 법적 효력은 사실상 중국 일방의 주장에 불과하며, 국제법적 영토선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65] 더욱이 2013년 1월 22일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중국이 만든 9단선과 인공섬에 영유권이 있는지를 따져보자며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하여 9단선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정의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중국은 이러한 논란과 판정에 구애받지 않고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데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항행자유'문제

남중국해문제와 관련한 또 다른 쟁점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군사활동 허용여부이다.[66] '항행의 자유(FON, Freedom of Navigation)' 허용여부를 두고 미·중간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국제법상 EEZ 내에서의 군사활동이 허용된다는 입장이고, 중국은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미·중은 남중국해 분쟁이전부터 '행행의 자유문제를 놓고 간헐적인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과거 미국은 중국 해남(海南/하이난)섬과 동중국해의 중국군사기지 근해를 항행하고, 이에 맞서 중국은 저지를 시도하는 사건들이 있었다.

2001년 3월 미군함정 보디치(USNS Bowditch)호 사건, 2001년 4월 1일 미국 EP-3와 중국전투기 충돌사건, 2009년 3월 미군함정 임페커블(Impeccable)호 사건, 2009년 5월 미해군 해양관측선 빅토리어스호(USNS Victorious)호 사건, 2010년 7~11월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USS George Washington)호 사건, 2011년 6월 U-2기 사건, 2013년 12월 미해군순양함 카우펜스(USS Cowpens)호 사건, 2014년 8월 18일 중국 J-11이 동중국해에서 미국 P-8 초계기 근접 비행한 사건 등이 바로 그것이다.[67]

미국은 기본적으로 국제법상 타국영해에서 군함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무

---

65) 김재철, "남중국해문제 현황과 평가,"『남중국해문제와 동아시아 안보』(2016년 제6차 세종정책안보포럼, 2016.6.15., 서머셋 팰리스 서울 2층), p.20.

66) 27개국 즉,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 에미리트, 이란, 몰디브, 포르투갈, 브라질,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아이티, 이집트, 케냐, 소말리아, 수단, 모리셔스,카보베르데(Cape Verde)가 EEZ 내에서 군사활동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이 중 중국, 북한, 페루는 군사활동을 직접 규제하려는 국가이다. 구자선, "남중국해 인공섬 관련 갈등분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주요국제문제분석』. No.2015-22(2015.8.20), p.12.

67) 구자선(2015.8.20), p.12.

해통항(innocent passage)'[68]이 허용된다는 입장이고, 중국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핵심이익' 대상으로 규정된 남중국해 일대에 배치된 해군기지 및 전략자산에 대한 미 군함과 정찰기의 정보활동을 저지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항행자유'는 미 해군의 동아태 전진배치 접근권 및 군사력 투사역량보장에 직결된 문제이며, 역내동맹・우방에 대한 신뢰확보차원에서 중요한바, 국제법을 근거로 무해통항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진입시 해당국가의 사전허가 취득여부이다. 중국은 국내법 규정을 통해 외국선박의 자국 EEZ 진입에 대한 '사전허가'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유엔해양법이 외국선박의 타국 EEZ내 항행을 금지하지 않고 있음을 들어 오바마 행정부이후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도 '항행의 자유'작전을 계속 전개해왔다. 좀 더 구체적인 쟁점으로는 군사적 정찰허용여부이다. 미국은 유엔해양법이 선박의 활동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정찰활동은 합법이며 중국의 간여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국은 EEZ에서의 항해 등 모든 활동은 해당국의 권리와 관할권을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를 충족해야 하고 제반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미국함정・항공기의 군사적 정찰활동은 무해통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69]

현재 남중국해의 인공섬 건설갈등에서 항행의 자유는 부차적인 문제로 여겨지는 점도 없지 않다. 우선, 당사국 중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말레이시아도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군사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항행의 자유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곳은 남중국해보다는 해남(海南/하이난)과 복건(福建/푸젠) 등 중국의 본토와 인접한 곳이다. 특히 해남은 중국의 전략핵잠수함 기지가 있는 곳으로 중국은 정찰을 막기 위한 전초기지로 서사군도를 이용하고 있다.[70]

다. '도서매립'문제

도서매립(인공섬 건설)문제와 관련해서는 '주권수호'주장 대(對) '불법군사화'비판이 대립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대상 7개 인공섬(암초)에서 매

68) 일반국제법상의 외국선박의 항해가 연안국의 안전・공서・재정적 이익이나 위생에 해가 되지 않는 한 영해를 자유로이 항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이 권리를 무해통항권이라 한다. 이병태, 『법률용어사전』(서울: 법문북스, 2011), "무해통항" 참조.

69) 김재철(2016.6.15), p.21.

70) 구자선(2015.8.20), pp.12-13.

립·확장 및 활주로·접안시설건설 등을 진행하여 일부는 완공했으며, 이를 '주권수호'차원의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방어용 무기도 배치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인공섬 건설은 아무런 국제법적 영유권 효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무기배치를 지적하며 '불법적인 군사화' 시도로 규정하여 중국의 행태를 맹비난해왔다. 이에 중국은 건설공사는 민간목적을 위한 것이라 설명하고, 필리핀·베트남도 인공섬 구축전례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중기준(double standard)'문제를 제기하고, 특히 오히려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 등 군사적 활동이 역내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국제법적으로 '적절한 통지(to give due notice)' 규정을 무시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71] 중국은 지난 2013년 1월 22일 필리핀이 인공섬을 만든 중국을 상대로 제소한 상설중재재판소의 인공섬 건설의 불법판정을 무시하고 있다.

중국은 2014년 8월 남중국해 남사군도의 한 산호초에 인공섬(Fiery Cross Reef, 永署礁)을 건설했고, 필리핀·베트남 등 주변국과 미국은 '국제규범에 반하는 현상변경행위'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중국은 공사를 강행했고 1년여 뒤 이곳에 길이 3㎞가 넘는 큰 섬이 생겼다. 활주로와 항구, 공중 조기경보 레이더, 대공포, 통신시설에 온실·농장까지 들어섰다. 미국에 대항할 중국의 해양 군사거점이 생긴 것이다. 이로 인해 미중갈등·대립은 더욱 커졌다.[72]

그동안 중국은 남중국해의 실질적 지배를 확대하면서도 비난을 피하는 방법으로 일종의 살라미 전술(salami tactic)을 써왔다. 미국이 아태지역에서의 중국견제전략인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전략'을 선언한 직후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남중국해에서 충돌이 급증했다. 그러나 중국은 2013년부터 주장을 완화하며 주변국 및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는 인상을 주었다.[73] 그러면서도 남중국해에서 눈에 잘 안 띄게 소규모로 확장해왔다. 문제가 된 피어리 크로스(Fiery Cross Reef, 永署礁/융수자오) 외에도 2014년경부터 게이븐 리프(Gaven Reef, 南薰礁, 난쉰자오), 남존슨 리프(Johnson South Reef, 西南礁, 츠과자오), 휴즈 리프(Hughes Reef, 东门礁, 둥먼자오)에서도 매립과 건설이 계속되어왔다.[74] 미국은 2013년 이래 남중국해에 활주로와 항구, 항공모함 접

71) 김재철(2016.6.15), p.22.
72) 배성규, "'남중국해' 불길, 서해(西海)와 멀지 않다," 『조선일보』, 2015년 10월 27일자.
73) 아산정책연구원, 『2015 아산 국제정세 전망: 전략적 불신』, 2014, pp.32~37.
74) CSIS,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 Website, Island Tracker" at http://amti.csis.org/island-tracker/(search date: August 18, 2017).

안시설, 통신시설 확보 등을 이유로 인공섬 7개를 건설해 1,300만m² 이상의 영역을 확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75]

문제는 단순히 인공섬 하나의 영유권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의 인공섬 건설은 미국에 대한 '반접근 지역 거부(A2/AD・Anti Access Area Denial)' 전략에 따른 것이다. 중국은 미 항공모함 등이 중국 주변해역에 접근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 오키나와와 남사군도 등을 잇는 '도련선(島鏈線)'이란 가상 방어선을 그었다. 남・동중국해 일대를 중국의 내해(內海)로 만들고, 그 너머까지 제해권을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이 중국의 대양진출을 막기 위해 쳐 놓은 포위선과 거의 겹치고 있다.[76]

2. 남중국해 관련 미중갈등의 향후전망

중국은 국력에 비례되게 해양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면서 적극적 해양활용 위한 군사력의 확보에 힘을 쏟아왔다. 군사력 건설분야에서도 해군력의 현대화에 대한 투자는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시진핑은 지난 2015년 9월, 2017년 말까지 30만 명의 병력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군은 예외다. 홍콩 '명보(明報)'에 따르면 중국은 해양강국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해군병력을 현재의 23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7만 명 정도를 증가시킬 예정이며, 로켓군도 14만 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77]

중국은 지난 2012년 9월 항모 랴오닝호가 실전배치되었다. 그 후 지난 2016년 말 다롄에서 건조중인 첫 국산항모 '001A'호(제2항모)의 주요 선체조립을 끝낸 상태이며 상하이 인근에서 이보다 큰 제3항모도 건조중이다.[78] 중국의 항모건조계획에 대해서는 이견이 엇갈리지만 2020년 이전에 2척 정도의 항모로 구성된 항모전력을 구성할 전망은 매우 높다. 현재 항공모함 1척과 전력화중인 항공모함 1척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2025년까지 3만~4만 톤급 중형항모 2척과 6만 톤급 대형항모 6척을 추가로 건조할 계획이다.

---

75) 정재만, "성급한 트럼프, 신중한 시진핑," 『시사In』, 제486호, 2017년 1월 11일자.
76) 배성규(2015.10.27).
77) 이재준, "중국, 해양강국 전략에 맞춰 해군병력 증원계획…7만명 정도," 『뉴시스』, 2017년 3월 6일자.
78) 유용원, "중국의 집요한 항모 굴기," 『주간조선』, 제2440호, 2017년 1월 9일자.

멀지 않아 우리는 태평양에 배치된 미국항모 5척과 수척의 중국항모의 대응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항모확보는 보통국가를 지향해 나가는 일본의 해군력에도 영향을 미쳐 일본도 유사한 수준의 전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중심에 한반도가 있다. 중국의 해양강국건설과 해양굴기는 지역의 해양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대한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나 중국의 도전은 거칠어지고 있다. 미국과 동맹을 맺은 일본의 역할은 커지고 있으며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 나가고 있다. 이들과 해양을 접한 한국에게는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다.[79]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핵심이익 양보불가'와 미국의 '국제규범 준수' 입장고수에 따라 양국간 전략적 경쟁과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양국간 직접 군사충돌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상당한 불확실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문제의 국제화를 반대하고, 실효적 지배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남중국해 주변국과의 마찰의 심화가 예상되며, 아세안 당사국들은 대미 안보협력강화를 통한 대중견제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80]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서 미중갈등의 전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중국의 '핵심이익' 주장 고수 및 군사적 대비강화의 추진이다. 중국은 남중국해문제가 소위 '핵심이익'에 속하는 것이란 점에서 타협대상이 아니며 양보불가사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중국은 최근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중국은 남사군도 분쟁도서에서 매립공사 및 인공섬 건설을 지속해나가고 "새로운 현상유지(new status quo)"상황을 조성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기정사실화(fait accompli)'전략 또는 '살라미전술'에 따라 중국주도의 새로운 현상유지가 사실상 현실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국방개혁을 통해 전구(戰區)체제에 의한 군사력 증강과 '합동성(聯合性, jointness)'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향후 남중국해 무력충돌 가능성에도 대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81]

둘째는 미국의 외교·군사적 대응을 통한 중국의 일방적 행위의 무력화(無力化) 시도이다. 미국은 남중국해문제에 관해 외교적으로 강도 높게 우려를 표

79) 안광수(2016.6).
80) 김재철(2016.6.15), p.5.
81) 박준성·최은미, "남중국해와 동아시아 안보,"『남중국해문제와 동아시아 안보』(2016년 제6차 세종정책안보포럼, 2016.6.15., 서머셋 팰리스 서울 2층), p.26.

명하고, 중국과의 직접대화 계기에는 노골적인 표현까지 동원하여 중국의 행위를 억지시키려 노력해왔다. 지난 2016년 6월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계기로 케리 미 전국무장관은 남중국해에서 "일방적 행동중단, 국제준칙준수" 등을 직접 언급하며 중국을 압박한 바도 있다. 향후 미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이른바 '항행의 자유(FON)'를 재확인하고 중국의 일방적 행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군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미국은 지난 2015년 10월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라센함'을 동해역에 파견하여 분쟁도서 인근을 통과시켰으며, 동년 11월에는 미 공군 B-52 전략폭격기가 동 해역상공에서 작전비행토록 했다. 또한 미국은 필리핀, 베트남 등 남중국해 분쟁당사국들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대중국 압박・포위망 구축을 진행중이며 앞으로도 이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82] 트럼트 행정부에 들어 2017년 2월 7월에도 'FON작전'을 수행한 바 있다.

셋째는 미・중간 전략적 경쟁・갈등의 격화전망이다. 중국의 '핵심이익 양보불가' 대(對) 미국의 '국제규범 준수주장'간 팽팽한 줄다리기 지속될 것이다. 중국은 미・중간 상호 '핵심이익'을 용인하는 소위 '신형대국관계'[83]를 주장해왔고, 남중국해문제를 국가존엄과 민족감정에 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바, 향후 대응은 점차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2012년 제18차 당대회를 통해 '해양강국 건설' 목표를 제시한 바 있고, 해양권리의 결연한 유지를 강조해왔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목표와 방침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미국 역시 패권경쟁 및 역내 세력균형차원에서 중국을 더욱 거칠게 압박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갖고 있으나, 우선은 '규칙기반 국제질서와 국제규범'이라는 보편적 명분을 앞세우며 동맹・우방국들과의 결속을 강화하고자 할 것이다. 결국 미・중 양측 전략적 사고의 지향점이 정반대로 흐르고 있고 입장차가 워낙 큰 탓에 일방의 양보나 타협이 없는 한 남중국해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상당기간 난항을 겪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넷째, 미・중의 직접적 군사충돌의 불확실성이다. 현재 미・중간 충돌 위험성 인식공유, 충돌방지기제(COC 등 합의) 존재, 지나치게 자극적인 군사행동의 자제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미・중 직접충돌의 가능성은 낮다. 남중국

82) 세종연구소, 앞의 글.

83) 신형대국관계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6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중국의 외교전략이다.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한경 경제용어사전』, 2016.6, '신형대국관계' 참조.

해문제의 향배관련 향후 주요변수로는 ①각국의 군사력 투사능력, ②국제화(미국·국제기구의 개입), ③지역화(아세안 차원 공동협력), ④민족주의·국내정치적 이용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중국과 인접국간 대립이 격화되며 상호무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는 미국이 군사적인 개입에 나설 수 있고, 이때 양국의 전략핵균형을 고려할 때 제한적·단기적·국지적인 미·중간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84]

향후 미국으로서는 역내에서 충돌발생시 과연 군사적인 개입을 할 것인지, 중국과의 직접충돌까지 불사할 것인지에 부심(腐心)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각종 시나리오 상정과 적절한 대응수준결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게 될 것이다. 중국 역시 부분적으로는 일정수준 권리(영유권 등)의 양도와 기타 양보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이 지속되는 한 중국도 대응에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85]

Ⅴ. 한국의 안보·외교적 대응방향

1. 남중국해 미중갈등의 파장전망

남중국해문제가 우리에게 미치는 안보·외교적 파장 및 영향은 어떠한가? 남중국해문제는 아시아 안보 및 주변국에 적지 않은 영향 및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것은 크게 다음과 같이 2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중국의 남중국해문제의 국제화 반대 및 동아시아 주변국과의 마찰 심화이다. 중국은 남중국해문제를 자국영토 주권문제로 인식하고 분쟁의 국제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다 강하게 견지할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남중국해문제의 국제화로 인해 역외세력(미국)이 개입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적극 피하려 하고 있다. 역내 분쟁 당사자 대부분은 중국에 독자적으로 대응할 역량이 부족한바, 역외세력의 개입없이는 중국에게 소위 '각개격파'를 당할 수 있는 극

84) 박준성·최은미(2016.6.15), pp.27-28.
85) 세종연구소, 앞의 글.

히 불리한 형국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다자협상보다 양자협상에 의한 문제해결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앞으로 분쟁도서에 대한 실효적 지배조치를 계속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변관련국과의 크고 작은 갈등과 마찰, 심지어 충돌까지 보다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아세안 당사국의 대미안보 협력강화를 통한 대중견제 모색이다. 역내 남중국해문제 당사국들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이 자신들의 경제・안보이익을 위협한다고 느끼고 '힘 있는' 역외 행위자(미국)의 개입을 기대하면서 전략적 제휴를 적극 모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필리핀, 베트남 등 역내국가들은 미국이 역내 대중국 견제거점 확보를 원한다는 점에 착안해 대미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바, 남중국해문제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개입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은 미국이 '클라크 공군기지'와 '수빅만 해군기지' 등 과거 미군이 사용하던 군사시설의 재사용 허용 및 추가적인 기지부지도 제공할 방침이다. 베트남은 남중국해에 연한 '깜라인만 기지' 사용을 미군에 허용했고, 이에 미국은 미-베트남전쟁 41년 만에 대베트남 무기수출을 허용하기도 했다.[86)]

2. 남중국해 관련 미중갈등과 우리의 대응방향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갈등상황에서의 우리의 대응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동맹안보와 경제외교의 조화이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되 중국을 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다. 핀란드가 그랬듯이 동맹국 우방이 없어지면 강국에 일방적으로 당하기 마련이다. 중국이 한미동맹의 해체를 요구하는 것도 그 점을 노린 것이다. 한미동맹이 깨지는 날은 중국이 한국을 경멸하게 될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남중국해문제로 촉발된 미중경쟁국면에서 미국의 안보・국방・군사차원의 요구를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과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서 미・중 양국

86) 박준성・최은미(2016.6.15), pp.28-29.

모두와 협력을 병행하는 것이 국가이익 최대화에 기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동맹론' 또는 '친중론' 또는 '중립론'도 거론되고 있으나 성급하게 '선택론'으로 스스로를 옭아맬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양국 관계가 본질적 변화를 보일 경우 우리가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총론수준의 논의를 각론수준의 구체적인 전략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87]

둘째, 국가간 발생가능한 갈등 및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는 각종 우연한 요소에 의한 분쟁촉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영토분쟁이 우연한 계기에 촉발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국내정치적 사안의 국제적 함의를 고려한 대내외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해양에서의 문제들을 외교활동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당면한 이어도문제를 포함한 한중간 해양경계획정문제 그리고 독도문제를 포함한 2028년에 종결되는 한일공동개발협정체결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대응능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필리핀의 중재재판소 제소건으로 인해 '학습효과'를 거둔 중국이 한중경계획정협상에서 까다롭게 진행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전략수립과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불리한 한일공동개발구역에 대한 협정이 아무 가시적인 소득 없이 종결될 경우 심각한 해양에서의 갈등을 불러오게 될 수도 있는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고 함께 요구된다.

셋째, 국가차원의 해양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의 정책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해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라 할 수 있다. 해양정책의 성공여부는 해양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88] 최근 남중국해 분쟁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서해에서는 북한의 해상도발이 잦았고, 동해바다에서는 독도문제로 한일갈등이 여전하며, 제주도 상공 남쪽바다 이어도 상공에 중국 정찰기들이 수시로 날고 중국해경 관공선도 수시로 출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89] 지난 2017년 5월 10일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통해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역량을 강화하겠다."며 해양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은 다행스럽고 고

87) 설인호(2016.6.15), p.98.
88) 안광수(2016.6).
89) 김강녕, "상호운용성·공통성 제고를 통한 해군·해경 협력증진방안," 대한민국 해군·한국해양전략연구소·해양경비안전본부, 『해군·해경간 상호운용성 증진 세미나 발표논문집』 2015.12, p.205.

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우리 해양경찰의 역할과 능력을 한 단계 더 강화함으로써 우리는 주변국과의 해양갈등 대처능력을 현실적으로 향상시키는 한편 주변국과의 갈등이 직접적인 무력충돌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해경의 발전은 그 역할의 복원에 그쳐서는 안 되며 우리의 미래이익이 달린 먼 해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지역개념의 해양경찰의 능력에 추가하여 지역을 초월한 이어도, 한일공동개발구역(일명 제7광구) 등 국가차원의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현재 수준을 능가하는 대형 경비함정을 운용하도록 하여 이어도 혹은 한일공동개발구역과 같은 원해에서 장기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90]

넷째, 국가간 문제해결을 위한 최종적인 수단은 군사력이다. 동아시아에 있어서 중국의 항모, 각종 수상함과 잠수함, 해군 항공전력의 발전과 이에 상응하는 일본의 해군력 발전은 한국의 입장에서 매우 우려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먼저 우리의 해군력 건설이 요구되며, 다음으로 해경과의 상호운용성 증진을 통해 해군력을 유기적으로 보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해군력은 해양에서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본주체로서, 해양에서의 외교적 역할과 사법적 역할이 수행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역할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해군력의 지속적인 발전은 군사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나라의 번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안인 것이다. 해군력은 다른 군사력과 달리 매우 다양하고 유용성이 뛰어난 군사력인바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에 상응하는 수준은 아닐지라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해군력의 적정수준의 발전이 필요하다. 적정한 힘을 갖출 때 군사적인 수단이면서도 외교를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자 국가주권을 수호하고 사법을 집행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이 해군력인 까닭이다.

해양력의 강화는 강국의 필수요건이다. 향후 우리의 강력한 해군력은 해양경찰의 임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양경찰도 평시에 해군의 경찰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유사시에는 해군에 배속되어 해군의 군사적 역할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91] 해양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해양력의 확보에는 상당한 시간과 재원의 투자가 요구되며,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능력을

90) 안광수(2016.6).
91) 김강녕(2015.12), p.230.

갖추는 것이 쉽지 않은바, 상호운용성 증진으로 사법과 무력충돌을 집행하는 해양경찰과 해군의 역량을 함께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92] 요컨대 군사적인 능력의 강화에 더하여 외교력의 강화이자 국가사법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의 강화로도 연결되는 우리 해군력의 강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Ⅵ. 결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는 국가간 해양분쟁과 해양으로부터 제기되는 여러 복합적인 위협 때문에 무력충돌을 수반하는 해양위기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해양우세의 중요성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일찍이 신라의 장보고는 해상의 패권을 장악하고 무역을 주도한 바 있으며,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은 해상을 장악함으로써 왜적을 물리치는데 기여했다. 구한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반도 주변해역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의 공고화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등 일본의 제국주의 확장에 기초를 제공했다. 이처럼 해양은 동아시아 역사에서 중대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93]

냉전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미국과 구소련은 해양에 대한 안전을 제공했으며, 냉전이후에는 미국이 전세계의 해양안전을 확고히 함으로써 세계의 질서를 주도해왔다. 그런데 중국의 괄목할만한 강대국으로의 성장과 중국 군사력의 현대화는 이와 같은 기존의 질서에 대한 중대한 변화의 초래 가능성과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전략을 통해 해양강국을 지향하고 있고 해양을 통한 성장과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필연적으로 중국의 해양에 대한 영향력 확대는 미국의 대응과 보통국가화를 추구하는 일본의 군사력 확충으로 연결될 것이다. 한반도 주변해양이 다시 격랑을 맞이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주요 영유권분쟁 중에서 미중관계 그리고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관계에 가장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문제가 바로

92) 안광수(2016.6).
93) 이서항, “동아시아 해양분쟁의 이해,”『선농문화포럼』, 2016.3.18, p.38.

남중국해 남사군도문제일 것이다. 남사군도가 관련국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 에너지 가치 차원을 넘어 군사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94] 향후 미중갈등이 차츰 고조되어갈 것으로 우려되는 남중국해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은 ①항행의 자유, ②평화적 해결, ③국제법 존중 등 3원칙 기조 위에서 슬기롭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중간에도 해양경계획정문제,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문제, 이어도 문제 등 잠재적 현안이 존재하므로 남중국해문제에 대한 입장을 섣불리 확정・공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서 주권문제는 당사국간 양자협상을 통한 해결을 지지하고, 안보문제는 다자적 협의체 및 대화채널을 통한 해법모색을 지지해 나가는 것이 순리일 것으로 판단된다.

남중국해 해상교통로 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의 이어도 주변해역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이다. 한국은 강대국에 의존한 냉전시대와는 달리 이제 연안의 해상교통로를 벗어나 동아시아 지역수준의 해상교통로를 공조적이 아니라면 자조적으로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다.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한국의 국제적 지위는 해상교통로 보호와 관련해서 점점 어려워지는 무임승차보다는 자구능력증대로 안전을 지켜나갈 것을 요구받고 있다.[95]

지구의 모든 나라들은 바다에서의 이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러한 노력들은 종종 역사상 주요한 전쟁과 국제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21세기에 들어 우리는 다시 바다가 국운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해양의 시대' 또는 '해양갈등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바다를 잘 활용한 나라들은 모두 강대국으로 성장했고, 특히 세계의 일등 패권국은 예외없이 모두 해양대국이었다는 사실은 바다가 국가안보 및 경제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변수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96]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등에서의 마・중 해양갈등에서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는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향후 남중국해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연합방위'태세 강화 및 동맹・우방간 '분업체계' 구축노력이 가속화될 경우, 한미동맹차원의 협력부담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한・미간 무기체계・지휘통제 상호운용성의 강화, 해외연합작전 역량확충 등 재정적・물리적 부담이 수반되는 조치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큰바 이에 대한 주도면밀한 대응방안

94) 이수형(2016.6.15), p.89.
95) 안광수(2016.6).
96) 이춘근, "21세기는 해양갈등의 시대,"『국방일보』, 2014년 5월 29일자.

이 요구된다. 예컨대, 국제무대에서 미국입장지지, 한일관계개선 및 한·미·일 3각안보체제 강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의 남중국해문제적용 등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요컨대 한국은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되 중국을 적으로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중국해문제로 촉발된 중국과의 경쟁국면에서 미국의 안보, 국방, 군사차원의 요구를 어떠한 수준에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대응방안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해양이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우리는 해양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정한 투자와 치밀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구민교, “미중간의 신해양패권경쟁: 해상교통로를 둘러싼 ‘점-선-면’ 경쟁을 중심으로,”『국제・지역연구』, 제25권 제3호, 2016년 가을호.

구자선, “남중국해 인공섬 관련 갈등분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주요국제문제분석』, No.2015-22(2015.8.20).

김강녕, “상호운용성・공통성 제고를 통한 해군・해경 협력증진방안,” 대한민국 해군・한국해양전략연구소・해양경비안전본부, 『해군・해경간 상호운용성 증진 세미나 발표논문집』2015.12.

김덕기, “미국 해군정보국 보고서를 통해서 본 중국해군: 개괄적 함의,” 한국국방연구원,『주간국방논단』, 제1590호(15-43), 2015.10.26.

김재곤, “왜 남중국海 놓고 다투나,”『조선일보』, 2011년 6월 16일자.

김재철, “남중국해문제 현황과 평가,”『남중국해문제와 동아시아 안보』(2016년 제6차 세종정책안보포럼, 2016.6.15., 서머셋 팰리스 서울 2층).

김종호, “인공섬 vs 미 항모, 남중국해 둘러싼 미・중 갈등 다시 고조,”『노컷뉴스』, 2017년 2월 24일자.

김태구, “중(中) 남사군도 분쟁 패소… 중재재판소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근거 없어,’”『쿠키뉴스』, 2016년 7월 12일자.

김택연, “미・중 관계와 남중국해 분쟁,”『아태연구』, 제23권 제2호, 2016.

김동엽, “아시아 생각: 필리핀과 난사군도, 또는 스프래틀리 문제,”『프레시안』, 2011년 10월 26일자.

김재철, “남중국해문제 현황과 평가,”『남중국해문제와 동아시아 안보』(2016년 제6차 세종정책안보포럼, 2016.6.15., 서머셋 팰리스 서울 2층).

문순보, “남중국해 영토분쟁: 중국의 지역패권주의와 관련국 대응,” 세종연구소,『정세와 정책』, 2011년 7월호.

박광섭, “남중국해 남사군도와 중국의 움직임에 대한 필리핀 아키노 행정부의 국방정책과 대응전략: 기능주의적 방식 모색,” 한국아시아학회,『아시아연구』, 제15권 제1호, 2012.

박준성・최은미, “남중국해문제 현황과 평가,” 남중국해문제와 동아시아 안보』(2016년 제6차 세종정책안보포럼, 2016.6.15., 서머셋 팰리스 서울 2층).

배성규, “‘남중국해’ 불길, 서해(西海)와 멀지 않다,”『조선일보』, 2015년 10월 27일자.

백병선, “남중국해 美・中간 해양갈등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향,” 국가안보전략연구원,『국가안보와 전략』, 제16권 제3호, 2016년 가을호.

아산정책연구원,『2015 아산 국제정세 전망: 전략적 불신』, 2014.

안광수, “한국 해양안보의 주요쟁점과 정책방향”, 한국해양안보포럼,『E-저널』, 제12

호, 2016년 6월호.
안광수, “트럼프 행정부와 시진핑 정권의 갈등과 한국의 해양안보,” 한국해양안보포럼, 『E-저널』, 제23호, 2017년 5월호.
양갑용, “시진핑-마잉주 이벤트, 왜 성공했나?,” 『프레시안』, 2015년 11월 9일자.
유용원, “중국의 집요한 항모 굴기,” 『주간조선』, 제2440호, 2017년 1월 9일자.
이기범, “‘남중국해 분쟁’ 중재재판소 결정 의의·파장,” 『한국경제뉴스』, 2016년 7월 17일자.
이병태, 『법률용어사전』 (서울: 법문북스, 2011).
이서항, “동아시아 해양분쟁의 이해,” 『선농문화포럼』, 2016.3.18.
이수진, “미국의 중요한 국가 이익과 중국의 핵심이익,” KIDA, 『동북아안보정세분석』, 2012.11.23.
이수형, “남중국해와 동아시아 안보,” 『남중국해문제와 동아시아 안보』 (2016년 제6차 세종정책안보포럼, 2016.6.15, 서머셋 팰리스 서울 2층).
이재준, “중국, 해양강국 전략에 맞춰 해군병력 증원계획…7만명 정도,” 『뉴시스』, 2017년 3월 6일자.
이준삼, “‘화약고’로 변해가는 남중국해…미중 갈등 ‘일촉즉발,’” 『연합뉴스』, 2015년 10월 20일자.
이지용, “남중국해 해양영유권분쟁: 역사적 배경과 현황 평가,” 『격월간 시대정신』, 2016년 3·4월호.
이춘근, “21세기는 해양갈등의 시대,” 『국방일보』, 2014년 5월 29일자.
이춘근, “트럼프시대 미국 해군력 현황과 전망,” 한국해양전략연구소, *Strategy 21*, Vol.20, No.1, Spring 2017.
장인철, “남중국해 위기,” 『한국일보』, 2015년 10월 25일자.
정삼만, “미국의 진행형 동아시아 군사력 재균형 전략과 해양안보 딜레마,”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편, 『2014-2015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 2014.12.
정영빈, “남중국해 미·중간 충돌핵심은 ‘무해통항권,’” 『연합뉴스 TV』, 2015.10.30. 14:28.
정재만, “성급한 트럼프, 신중한 시진핑,” 『시사In』, 제486호, 2017년 1월 11일자.
최현수, “남중국해가 심상치 않다,” 한국해양안보포럼, 『E-저널 』, 제5호, 2015년 11월호.
조혜리,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 『한국경제 뉴스』, 2015년 10월 30일자.
하종대, “사드 보복은 중국의 커다란 전략적 실수,” 『동아일보』, 2017년 3월 27일자.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한경 경제용어사전』, 2016.6.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전략경쟁』, 2016.4.1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동향분석』, Vol.20, 2017.3.

Brunnstrom, David and Spetalnick, Matt, "Tillerson Says China Should Be Barred from South China Sea Islands," *Reuters*, January 12, 2017.

Dolven, Ben, "Chinese Land Reclamation in the South China Sea: Implications and Policy Options," *CRS Report*, 18 June 2015.

Gray, Alexander and Navarro, Peter, "Donald Trump's Peace through Strength Vision for the Asia-Pacific," *Foreign Policy*, November 7, 2016.

Haas, Benjamin, "Steve Bannon: "We're going to war in the South China Sea...no doubt'," Guardian, February 2, 2017.

Mahan, Alfred T., *The Influence of Seapower upon History: 1660-1783*(Boston: Little Brown and Co. 1889).

Metelitsa, Alexander and Kupfer, Jeffrey, "Oil and Gas Resources and Transit Issues in the South China Sea,"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Issue Brief*, 2014.

Perles, Jane, "The Options for China If Trump Uses Taiwan as a Bargaining Chip," *New York Times*, December 13, 2016.

Palmer, James, "China Just Won the U.S. Election," *Foreign Policy*, November 9, 2016.

Panda, Ankit, "Donald Trump Won. Prepare for Uncharted Geopolitical Waters in Asia," *Diplomat*, November 9, 2016.

"Spotlight: Official Reaffirms Chinese Stance on South China Sea," *Xinhua*, January 26, 2017.

세종연구소, 『2017년 제6차포럼 결과보고서: 남중국해문제와 동아시아 안보』, http://www.google.co.kr/(검색일:2017.8.17).

신상진, "남북관계 안정적 관리로 미중갈등 한반도 영향 최소화해야,"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http://kcrcpolicy.blog.me/220902519815(검색일: 2017.8.15).

채은하, "남중국해 분쟁," 『Daum백과』,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 XXXX85(검색일: 20178.11).

한국국방연구원, "남중국해 분쟁," http://www1.kida.re.kr/woww/history/closed_detail.a sp?i dx=1121&closed=101&msection=100(검색일: 2017.8.10).

"남중국해의 영토 분쟁,"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검색일: 2017.8.11).

"인공섬," 『Naver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600 1&cid=40942&categoryId=31719(검색일: 2017.8.12).

KIDA, "남중국해 분쟁일지," 『Naver 지식백과: KIDA 세계분쟁 데이터베이스』, http:// terms.naver.com/(검색일: 2017.8.17).

CSIS, "Federated Defense Project," https://www.csis.org/programs/international-security-program/global-threats-and-regional-stability/federated-defense(search date: August 17, 2017).

CSIS,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 Website, Island Tracker" at http:// amti.csis.org/island-tracker/(search date: August 18, 2017).

Mahnken, Thomas, "Alliance Maritime Strategy in Asia," http://goo---gle.appspot.co m/(search date: August 17, 2017).

"Nine-Dash Line," *Wikipedia*, July 28, 2017, https://en.wikipedia.org/wiki/Nine-Dash_ Line(search date: August 19, 2017).

"Offset Strategy," *Wikipedia*, January 21, 2017, https://en.wikipedia.org/wiki/Offset_ strategy(search date : August 17, 2017).

https://www.whitehouse.gov/(search date: August 17, 2017).

Abstract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China over the South China Sea and Korea's Responses

Kim Kang-nyeong*

This paper is to analys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over the South China Sea and Korea's responses. To this end the paper is composed of 6 chapters titled instruction; the current status of South China Sea sovereignty disputes; changes in US and Chinese maritime security strategies and the strategic values of the South China Sea; key issues and future prospects for US-China conflicts in the South China Sea; South Korea's security and diplomatic responses; and conclusion.

The recent East Asian maritime security issue has evolved into a global issue of supremacy between the US and China, beyond conflicts over territorial disputes and demarcation among the countries in the region. China is pursuing offensive ocean policy to expand economic growth. The core of the maritime order that the United States intends to pursue is the freedom of navigation in the oceans and the maintenance of maritime access. China is making artificial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claiming the sovereignty of these islands, building strategic bases in East Asia, and securing routes. The United States has developed several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to neutralize the declaration of the territorial sea surrounding Chinese artificial islands. We can not be free from marine conflicts in the South China Sea and the East China Sea. Regarding the South China Sea dispute, it is expected that the strategic competition and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intensify due to

97) President, Institute of Global Harmony, Development Advisor for the ROK's Navy, Ph.D of Political Science.

China's failure to make concessions of core interests and adherence to the US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norms. In the midst of conflict over the South China Sea, we need a harmonious balance between our alliance security and economic diplomacy. We must continue our efforts to strengthen the ROK-US alliance but not to make China an enemy. Considering the significant impacts of the oceans on the survival and prosperity of the nation, we must continue to develop our interest in the oceans, appropriate investments and tactical strategies.

Key Words: South China Sea, Maritime Territorial Dispute, Strategic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China, Artificial Islands,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논문접수 : 2017년 9월 2일 | 논문심사 : 2017년 11월 15일 | 게재확정 : 2017년 12월 12일